

# 정보화사회 초대석

박성득(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통신시장 개방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돼야...”

- 양국간 이해증진과 점진적 접근 필요성 認定이 最大成果  
- 정보통신 등 취약분야 중점육성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정보화사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각 분야에서 조용히 일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이 어느 틈엔가 우리를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서게 한 것이다.

최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표한 '정보통신사업 종합추진계획' 중 오는 96년까지 PC 1천만대를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은 정보화의 가속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화사회로 가는 도중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

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최근 국내 정보통신산업계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한·미 통신협상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통상마찰에서 비롯된 국내 통신시장 개방압력은 자칫하면 정보주권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한 확고한 기반조성은 2천년대 기술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체신부의 역할은 막중하다. 지난달 초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체신부 회의실에서 우리측 실무자들과 함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본란에서는 한·미 통신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로서 예리한 판단력과 명확한 논리로 미국측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던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국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 전망 등을 들어본다.

지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체신부에서 열렸던 한·미 통신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한 한·미 양측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은 크게 통신서비스부문과 통신기기부문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부문의 경우 금번 회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독점서비스의 범위와 개방시기, 경쟁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접근조건, 경쟁서비스에 대한 관리, 독점서비스의 요금체계,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독립규제기관 설립 등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기부문의 경우에는 표준제정절차 및 인증제도 개선문제, 정부 구매제도 개선문제, 통신기기 수입관세 인하문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양측의 기본입장은 통신서비스 부문의 경우 미측에서는 독점서비스로 유보할 서비스의 범위를 가급적 빨리 확정할 것과 그 범위는 전신·전화 및 통신망 기반구조의 제공 등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서비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독점으로 하고 어떤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할런지를 오는 91년까지는 확정하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때 한국

의 정치·사회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미·일·영·EC등 타국의 사례 검토와 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접근조건 보장과 관련하여 미측에서는 기업내 통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경쟁서비스 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안을 철폐하고 국제간 정보유통을 자유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에서는 한국의 현 제도를 들어 시장접근조건에 있어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측이 사업자 편익증진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최종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을 다 고려해야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접근조건 보장과 정보유통 자유화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을 심층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경쟁서비스에 대한 관리문제의 경우 미측에서는 면허, 등록 등의 관리를 일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측은 서비스에 따라 완전자유화가 아닌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독점서비스의 요금체제에 대해 미국은 전용회선 요금 등에 종량제요금을 도입하거나 경쟁사업자를 차별하여 경쟁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고, 우리는 현재의 요금구조 하에서 이용자에 따라 요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예가 없으며, 앞으로 독점사업자의 통신요금이 원가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설명하

였습니다.

그리고 독립규제기관설립에 대해 미측에서는 공정경쟁 여건 보장을 위해 독점사업자와 분리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에서는 체신부가 이미 독점사업자와 분리되어 있고, 또 경쟁사업자가 여럿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경쟁사업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체신부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서비스부문의 이같은 심각한 상호견해 차이와는 달리 기기부문에서는 큰 대립이 없었습니다. 통신기기부문에서 표준제정절차 및 인증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미측에서는 동 절차를 명확히 하고, 표준제정시 미국기업의 참여기회 보장, 통신장비의 규격과 기술기준의 통신망 위해방지 수준으로서의 미국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인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측에서는 표준제정 절차를 명확히 할 계획임을 밝히고, 시험성적서의 인정은 상호주의에 의거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구매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공공부문 통신구매시 공개적, 비차별적 절차확립 및 참여기회 보장과 GATT협정 가입시기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우리측은 구매기회 보장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용할 것이고, GATT가입은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세문제를 놓고 미측에서는 현행관세율을 3~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

은 현해 관세인하게획에 의거, 매년 2%씩 인하하여 오는 93년에는 8%수준까지 인하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대폭인하는 불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와 관련 미측에서는 모든 투자제한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반면, 우리측에서는 광케이블과 전자교환기에 대해 연내에 투자제한 철폐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통신시장 개방시기에 대해 귀부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통신시장의 개방은 국내 통신사업의 육성과 국제적인 통신시장 개방동향, 급변하는 통신기술의 발전추세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부터 기본 통신시설 확충을 위해 전화시설의 현대화와 대량공급 정책을 추진하여 어느정도의 기본 통신수요를 충족시켰으며, 데이터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게 위해 4차에 걸쳐 회선사용제를 완화하여 DP·DB 및 부가가치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신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로 정보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 경쟁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통신시장

개방방안을 수립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4차에 걸친 회선사용제도 완화로 데이터통신부문에 점진적인 발전을 추진해 온 것처럼, 통신서비스 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있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향은 공공성이 약한 분야의 서비스나 고도화된 분야부터 경쟁원리를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법이나 범위, 시기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사항 가운데 우리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독점을 유지할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조속히 결정, 발표하되 정부가 그 범위를 전신, 전화서비스와 통신망 기반구조의 제공을 넘지 않도록 하고, 경쟁서비스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경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통신시장 발전방향과 개방시기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각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해나

갈 것이며, 가급적 신중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측이 얻은 성과가 있다면?**

미국측의 요구사항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험성적서 인정, 표준제정 및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 기기분야의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정부구매제도의 GATT협정 가입 검토와 수입관세의 단계적 인하 등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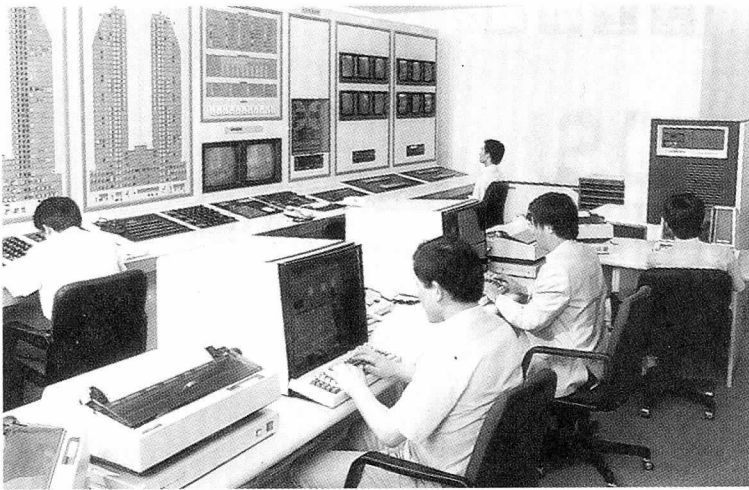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간 상호관심 사항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내시장 개방에 있어 점진적 접근의 필요성을 미국측이 인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측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난 9월 회담과 앞으로 있을 회담에서의 우리측 대응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서비스시장에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통신사업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 기본 통신망과 국민의 필수 서비스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통신기기 분야의 경우에는 기기의 표준제정 및 인증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험 및 인증기준을 완화하며,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인정 등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신공사의 장비구매



시 GATT선진국 수준의 구매관행을 수립, 참여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선기기의 규제완화와 전파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시장 개방이 국내 통신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통신산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통신산업은 80년대 이후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기본 통신수요는 어느정도 충족한 상태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지속적인 통신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컴퓨터 제조기술이 미약하고 보급률도 낮아 그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리고 공중 데이터교환망의 가입실적도 저조하며, 정보통신서

비스에 대한 수요자체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첨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강화와 정보통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육성 등으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부가 갖고 있는 향후의 정보화계획을 들려주십시오.**

체신부에서는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와 경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정보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 확대와 사업자로서의 법적지위 부여를 추진하고, 시장확대 및 수요개발을 위해 정보통신단말기 1,000만대 보급계획과 PC통신망 및 ISDN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 잠재수요의 개발을 위해 공중정보통신망의 확충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도청소재지 이상에는 패킷교환기를 설치하고 시단위 및 주

요공단까지 다중화 장치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다양화, 고도화해 가고 있는 국민들의 통신이용 욕구충족을 위해 IBS, MHS, EDI등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의 적극 지원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추진과 주전산기 개발보급, 그리고 통신방식이 다른 컴퓨터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전산망 표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국내 통신산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통신산업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화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사회 전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며, 실질적인 정보화는 각계각층, 특히 통신산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국가경제에 있어서 대외무역 의존도 증가, 그리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통신사업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신산업의 육성 및 대외경쟁력 확보는 국가산업 전체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통신산업계에서는 산업의 정보화 및 각 분야의 정보화를 위해 관·학·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